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목 차

I. 검토배경 ····· 3

II. 수신료 조정안의 주요내용 ····· 6

1. 추진배경 ····· 6

2. 한국방송공사의 새로운 비전과 조직·경영 혁신 ····· 6

3. 수신료 금액 조정안 ····· 8

III.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11

1.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 11

가.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위상 ····· 11

나. 공적책무 확대사업의 적절성 ····· 13

1) 공적책무 확대계획의 수립방식 ····· 13

2) 공적책무 과제의 선정 및 우선순위 ····· 13

3) 민간제작부문과의 협업 ····· 15

4)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의견서 검토 · 16

5) 공적책무로서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 ····· 20

2.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과 타당성 ····· 22

가.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정상황 ····· 22

나. 한국방송공사의 재정상황 및 재정수지 전망 ····· 23

1) 한국방송공사의 수입·지출 ····· 23

2) 한국방송공사의 생산성 ····· 25

3) 한국방송공사의 수지 전망 ····· 25

4) 인력 및 구조조정 계획의 타당성 ····· 28

5) 경영혁신 및 자구노력 계획의 적절성 ····· 29

3. 텔레비전수신료 관련 제도개선 방안 ····· 31

가.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 제고 ····· 31

나. 수신료 조정절차 개선 ····· 31

1)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된 문제점 ····· 31

2) 공적책무와 수신료 금액 결정 주기 ····· 33

3) 수신료 조정안 작성 주체 ····· 34

4) 국회에서의 수신료 처리절차 ····· 36

Ⅳ. 종합의견 ····· 37

I. 검토배경

한국방송공사는 2021년 7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이하 “조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법률, 회계, 방송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신료 자문반을 구성·운영하고, 공영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미디어환경은 방송통신융합의 심화,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 등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는 기존 방송의 개념을 미디어로 확장시켰으며, 국내로 한정되어 있었던 시장의 영역은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힘입어 국내외에서 수많은 미디어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송통신서비스와 콘텐츠의 양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은 방송국이 편성한 프로그램을 TV로 시청하는 소극적 행태에서 나아가 스스로 콘텐츠를 탐색하고,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좀 더 적극적인 행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와 콘텐츠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였으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미디어와 콘텐츠를 찾는 것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허위조작정보와 사회적 혐오표현 등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전파[1]되고 있으며, 말초적 감정을 자극하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문화정체성의 후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 세계경제포럼은 「Global Risk Report 2019」에서 가짜뉴스가 포함된 트윗은 놀라움과 혐오감 등 개인의 감정을 자극하여 그렇지 않은 트윗보다 6배 빨리 전파된다고 밝히고 있음

최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영방송의 사회적 기능과 공적 책무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디어시장의 건강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영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의 공영미디어(Public Service Media)로의 혁신적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앞으로도 민간부문이 제공하기 어려운 공적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정확한 사실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제고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품격의 교양,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제작되지 않는 비상업적 콘텐츠와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혁신적인 콘텐츠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콘텐츠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이러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재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공영방송 수신료는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제작,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근거가 됩니다. 최근 공영방송의 방송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안정적 재원으로서 수신료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가 국민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수신료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통해 수행하려는 공적 책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이에 동의할 때 비로소 특별부담금인 수신료는 그 의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본 조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환경에서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역할과 공적 책무를 기준으로 이번 수신료 조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검토과정에서는 수신료의 인상여부에 따라 역할과 책무를 가감할 수 있다는 산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 조정안에 제시된 공적책무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한국방송공사가 제시한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수신료 조정안이 한국방송공사의 재정안정에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납부자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출한 공적책무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 규모의 적절성과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의 타당성, 내용과 규모의 적절성을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수신료의 사용과 관련된 회계의 투명성 제고,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 및 처리절차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II. 수신료 조정안의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한국방송공사는 최근 미디어환경이 파편화, 상업화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국가들과 같이 공공 영역의 기초와 기반이 되는 공영방송을 차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여 미디어 상업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역사가 요구하는 공영방송의 역할, 이 시대에 필요한 공익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주권의 시대를 열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저널리즘을 확립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영방송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정립하며, 지역분권 등 공동체의 다양성을 앞장서 구현하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방송공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있어 보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이며, 조직의 혁신에는 더욱 과감한 공영미디어로 거듭나는 데 매진함으로써 안전과 상생, 공감과 위로, 연대와 소통의 가치를 키우고 나누는 따뜻한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한국방송공사의 새로운 비전과 조직·경영 혁신

한국방송공사는 본 수신료 조정안에서 '공영방송 50년, 국민의 KBS로 거듭나겠습니다.'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청자주권 시대를 엽니다.', '공정과 신뢰의 KBS 뉴스를 확립합니다.' 등 다섯 가지의 비전과 세부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표 1] 새로운 KBS의 비전 >

공영방송 50년, 국민의 KBS로 거듭나겠습니다.	
1. 본격적인 시청자주권 시대를 엽니다. - 시청자가 만들고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 - 시청자 소통과 참여 확대 - 경영정보의 공개와 설명책임 강화 2. 공정과 신뢰의 KBS 뉴스를 확립합니다. - KBS 공정성 강화 프로젝트 추진 - 팩트체크 K 센터 운영 - 공영방송과 저널리즘 교육 강화 3. 재난위기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 국가재난정보 허브 구축, 모든 미디어와 공유 - '24시간, 지역거점형, 시청자 참여형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 '완결형, 미래대비형 재난방송'으로 진화	4. 공영방송만의 고품격, 디지털, 글로벌 콘텐츠로 차별화합니다. - 공영방송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에 집중 - 방송을 넘어 공익적 디지털 콘텐츠 확대 - 글로벌 진출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업 확대 5. 지역분권과 사회공동체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 제작의 분권화로 지역방송 강화 - 실버세대, 다문화,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 확대 - 공적재원의 가치를 확대, 미디어 다양성·공익성 제고

또한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의견청취와 공론화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책무를 8대 과제, 37개 사업으로 정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는 향후 경쟁력 향상, 비용절감, 수입확대를 위한 조직쇄신과 자구노력을 강화해 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직쇄신방안으로는 융합형·기능별 조직으로의 재설계, 고호봉·고연령·연공서열형 인력구조 개선, 계열사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자구노력으로는 2026년까지 921명 단계적 감축, 초긴축 예산(최근 5년 평균 1.5조원을 '26년까지 유지)을 통한 경비절감, 콘텐츠 수입확대, 유휴재산 매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3. 수신료 금액 조정안

한국방송공사가 제시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은 월 3,800원으로 현재 2,500원 보다 1,3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수신료 인상의 시행 시기는 국회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금액 조정 사유로 공영미디어로의 공적책무 및 역할확대와 공적재원 중심의 재원구조 개선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 공영미디어로의 공적책무 및 역할 확대 : 새로운 미디어·사회환경에서 요구되는 공적책무사업 수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진실에 근거한 공정한 저널리즘의 확립,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감동의 콘텐츠 제공,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사회통합과 소수자 보호, 시청자 주권의 확대와 설명책임 강화 등 공영방송만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공적책무를 설정하고 추진코자 함"

▶ 공적재원 중심의 재원구조 개선 : 수신료 재원 비중 확대를 통한 공적 서비스 기반 강화

"공영방송을 넘어 공영미디어로서, TV를 넘어 다양한 디지털 영역으로 고품격 콘텐츠와 공익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방송과 군소·지역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상생의 미디어 환경에도 기여하고자 함"

< [표 2] 공적책무확대에 따른 비용추계('22~'26년)[2] >

(단위: 억원)

비 전	8대 과제 37개 공적책무(세부예산)	비용
개 방	1.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 3개 책무 1-1. 숙의토론 방식의 관여 확대와 정보공개・소통강화(50) 1-2. 국민 공모 콘텐츠 제작(940) 1-3. 사회 공동제작단을 통한 공동체 가치와 지식 축적(758)	1,748
신 뢰	2.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현 : 5개 책무 2-1. KBS공정성 강화 프로젝트(11) 2-2. KBS저널리즘칼리지, 전문가그룹과의 협업취재 확대(27) 2-3. 팩트체크K 센터 설치운영(69) 2-4. 여론(공론)조사를 통한 의제설정 강화(133) 2-5. 시민참여형, 소통형 저널리즘 구현(25)	265
안 전	3.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 4개 책무 3-1. 재난대응형 'KBS NEWS D-live' 스트리밍 채널 운영(325) 3-2. 기후재난 대응 전담조직 설치, 운영(126) 3-3. KBS재난 데이터허브 및 타미디어 실시간 공유체제(348) 3-4. 재난 현장 접근성 및 송출기능 강화(312)	1,111
품 질	4. 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 6개 책무 4-1. 세계 수준의 고품격 다큐시리즈 <대기획K> (415) 4-2. 정통 대하 역사드라마 제작(2,300) 4-3. UHD 역사다큐, 역사기행 프로그램(700) 4-4. 4차산업 선도를 위한 기초과학 프로젝트(400) 4-5. 국민감동 가요콘텐츠 제작(300) 4-6. 한류콘텐츠 공연, 문화, 육성사업(335)	4,450
	5.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개방 : 3개 책무 5-1. 공익콘텐츠 공유를 통한 개방형 아카이브 구축(93) 5-2. '디지털 KBS 한국어센터' 신설 및 운영(25) 5-3. 모든 세대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2,349)	2,471
	6. 차세대 방송 서비스 역량 확대 : 4개 책무 6-1. 차세대 미디어기술 융합 및 고도화(127) 6-2. UHD TV방송 전국화 및 모바일 방송서비스 활성화(1,142) 6-3. 무료보편적인 방송시청권 강화(93) 6-4. 미래방송서비스 인재양성(1,300)	2,662
다양성	7.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 6개 책무 7-1. 로컬프로그램 제작, 편성 확대(653) 7-2. 생활권역형 취재센터 및 지역언론 포털 운영(137) 7-3. 지역별 미디어 교육・체험센터 개설(158) 7-4. 지역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 및 문화활동 지원(153) 7-5. 지역을 조명하는 고품격 다큐 콘텐츠 제작(560) 7-6. 지역순회 찾아가는 연주회 및 음악회(94)	1,755
	8.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 6개 책무 8-1. 소수자를 위한 공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106) 8-2. 장애인 정보서비스와 다문화 외국인 언어서비스 강화(90) 8-3. 장애인, 소수자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30) 8-4. 다문화 청소년과 건전한 학교문화를 위한 소통콘텐츠(310) 8-5. 어린이 전용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채널 확대(440) 8-6. 중소・지역미디어의 다양성 지원(3,577)	4,553
5대 비전, 8대 과제, 37개 책무		19,015[3]

2) 동 금액은 로컬광고 폐지에 따른 수입 변동액(-254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3) KBS는 수신료 조정안에서 총 소요예산을 1조 9,015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일부 재난방송 관련 사업계획 예산을 조정[최초 1,111억원에서 1,038억원으로 국가 예산 지원액(73억원)만큼 축소 조정]하여 제5차 보완 자료 회신 시 공적책무확대사업 비용 총액을 1조 8,942억원으로 수정함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의 조정 없이 동 공적책무 확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연간 3천 6백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상업매체와의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공적재원 중심의 재원구조 위에서 상업적 보조재원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3,800원으로 1,300원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조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2026년 58%로 향상되고 재정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표 3] 수신료 조정 전 수지전망('22~'26) >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연평균
1. 수 입	14,865	14,738	15,006	15,000	15,281	74,890	14,978
- 수 신 료	6,984	7,064	7,140	7,213	7,283	35,684	7,137
- 광 고	2,362	2,362	2,362	2,362	2,362	11,811	2,362
- 기 타	5,519	5,312	5,504	5,425	5,635	27,396	5,479
2. 비 용	18,330	17,940	18,563	18,587	19,552	92,972	18,594
3. 당기순손익	-3,466	-3,202	-3,556	-3,587	-4,271	-18,082	-3,616

※ 수신료 금액 변동 없이(월 2,500원), 공적책무 확대사업 예산을 반영한 수지전망

< [표 4] 수신료 조정 후 수지전망('22~'26) >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연평균
1. 수 입	18,509	18,425	18,730	18,762	19,079	93,506	18,701
- 수 신 료	10,615	10,737	10,853	10,964	11,071	54,239	10,848
- 광 고	2,362	2,362	2,362	2,362	2,362	11,811	2,362
- 기 타	5,532	5,326	5,515	5,436	5,646	27,456	5,491
2. 비 용	18,500	18,150	18,661	18,653	19,544	93,508	18,702
3. 당기순손익	10	275	69	109	-465	-2	0

III.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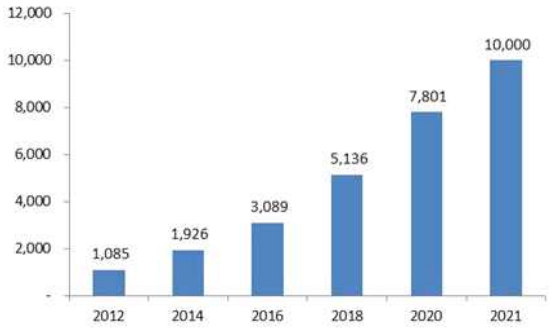
1.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가.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위상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새로운 방송프로그램과 방송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는 무료보편적 방송으로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방송의 지역성을 제고하며,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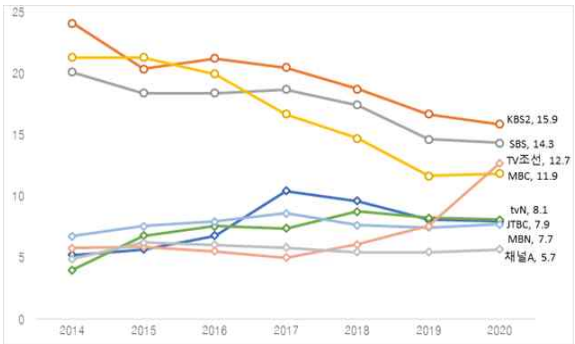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료방송 플랫폼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률 확보를 위한 방송사업자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공영방송 등 공공적 성격이 강했던 '방송'시장이 경쟁과 상업성이 중시되는 '미디어 시장'으로 확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표 5] 국내 OTT 시장 규모 추이 >



자료 : Statista(2021.5)

< [표 6] 일일 평균 개인 시청시간 추이 >



(단위: 억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공영방송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가짜뉴스의 폐해와 함께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공영방송에 의존했습니다. 영국 BBC 뉴스·정보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신뢰도가 높은 공영방송의 뉴스시청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영방송 뉴스의 시청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5]. 이것이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공영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의 공영미디어(Public Service Media)로의 발전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또한 수신료조정의 필요성을 '공영방송을 넘어 공영미디어로서, TV를 넘어 다양한 디지털 영역으로'라고 설명하는 등 공영방송의 역할에서 공영미디어로 발전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영미디어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 스스로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미디어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몇 개의 공적 책무수행이 아니라 조직전반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는 전사적 차원의 경영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

4) BBC의 Tony Hall 사장은 2020.8월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TV페스티벌에서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또 하나의 팬데믹이라 말하면서 BBC의 공적 가치가 지금처럼 필요했던 때가 없었다(BBC's public values have never been more needed.), "영국의 가장 신뢰할 만한 뉴스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지금보다 더 분명하고 중요한 적이 없었다"라고 발언

5)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영방송보다 유료방송 뉴스전문채널의 시청률이 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공영방송이 24시간 뉴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나. 공적책무 확대사업의 적절성

한국방송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공적책무 사업은 미디어 시장 전반의 건강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며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적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목표설정과 이행계획 수립, 과제의 우선순위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공적책무 확대계획의 수립방식

수신료 조정안은 한국방송공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책무의 목표와 이행수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수신료 조정안이 전체 재정계획이 아닌 수신료 증액분(1,300원)에 한정된 계획만을 담고 있기 때문[6]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조정이 없더라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적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조직과 기능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기존 재원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입할지를 우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공적책무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공적책무 과제의 선정 및 우선순위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통해 어떤 공적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방송공사는 두 차례의 공론화 조사결과와 이사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8대 과제, 37개 공적책무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론조사에서

6) 한국방송공사는 과거 2010년, 2013년에도 수신료 증액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함

조사된 사업의 우선순위와 한국방송공사이사회의 우선순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보적인 저널리즘 신뢰 구축', '국가 재난방송 거점역할 확립' 및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과제의 경우에 우선순위의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 [표 7] 공적책무 관련 과제의 필요성 순위 >

구 분	과제 필요성 순위			조정안 상 소요예산
	1차 공론조사	2차 공론조사	KBS 이사회	
1.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2	1	2	1,748
2. 독보적인 저널리즘 신뢰 구축	1	2	-	265
3.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3	3	-	1,111
4. 디지털 콘텐츠 확대 및 개방	4	4	3	2,471
5.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6	5	4	4,553
6.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역량 확대	7	6	-	2,662
7.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11	11	1	1,755
8. 고품격 공영콘텐츠 제작 확대	5	8	5	4,450
9. 새로운 한류 점화	11	10		
10. UHD 방송선도	9	7		
11. 한민족 평화공존 기여	12	12		
12. 미디어 다양성 상생 지원	8	9		
계				19,015

이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 내·외부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직접 받아 운영되는 사회적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영방송이 추진해야 할 공적책무와 우선순위, 또는 그 선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적책무의 우선순위는 또한 수신료 배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분야별 특성이 다르므로 금액이 우선순위에 비례하기는 어렵더라도 수신료의 배정순위나 증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수신료 조정안은 공론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던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현[7]' 과제(1차 1순위, 2차 2순위[8])는 투자규모가 매우 작은 반면(265억원, 1.4%), 공론화과정과 이사회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고품격 공영콘텐츠 제작 확대' 과제에는 가장 큰 사업비(4,450억원, 전체의 23.4%)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수신료조정안이 공론화과정을 통해 마련된 만큼, 공적책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투자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공영방송의 분야별 콘텐츠 제작 투자방향, 즉 뉴스·시사, 교육·교양,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자원배분을 결정하는데도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가고 있는 유럽의 공영방송들은 콘텐츠 제작비의 가장 큰 비중을 뉴스와 시사분야에 두고 있으며, 그 비중을 확대(2018년 27.9% → 2020년 29%)해 가고 있습니다[9].

< [표 8] 2020년 유럽 공영미디어의 콘텐츠 제작 지출비중(%) >

분야별 콘텐츠 지출비중	뉴스, 시사	예술, 문화, 교육, 과학	픽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29%	11%	19%	13%	10%	19%

공영방송 유형별 뉴스, 시사 비중	공영라디오 (Radio only)	라디오와 TV (Radio and TV)	공영 tv (TV only)	전체 평균
	56%	31%	24%	29%

3) 민간제작부문과의 협업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공적책무 확대계획에는 고품격 다큐와 대하역사드라마, 국민감동 가요콘텐츠, 연간 280편 이상의 지역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제작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공적책무 확대를 위해 이처럼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독보적인 저널리즘 신뢰 구축' 과제가 수신료 조정안에서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현' 과제로 명칭 변경됨
8) 2차 1순위는 경영투명성 관련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프로그램 제작 등과 관련하여서는 뉴스의 신뢰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공적책무라 할 수 있음
9) EBU, Public Service Media and News(2021.8월)에서 인용하였음(EBU 회원국 내 공영미디어 대상 조사)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디어환경은 콘텐츠제작을 공영방송 등 소수방송사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콘텐츠제작을 위한 인력과 시설, 투자재원 등의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제작역량이 크게 확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영방송이 자체제작 대신 외주 또는 상호 협력을 통한 제작방식을 적극 활용할 경우 제작비 절감 등 수신료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은 잠재력이 큰 콘텐츠 제작 사업자를 발굴하고 성장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제작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므로, 어떤 분야에서 민간 부문과 협력할 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조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신료 의견서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사업 중에는 민간과의 협업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부문에서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업적 성격의 프로그램은 공영방송이 꼭 제작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상업적 콘텐츠의 제작보다는 비상업적 콘텐츠와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혁신적 콘텐츠의 제작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의 방송환경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4)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의견서 검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1990년 설립된 이래 보편적 교육방송콘텐츠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보편적 방송복지 제고, 고품질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등의 공적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번 수신료 조정안 검토 과정에서 교육공공성 강화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5대 방향, 11대 약속, 30개 실행사업의 수행을 위해 총 8,216억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 [표 9] EBS 공적책무확대에 따른 비용추계('22-'26년) >

(단위: 억원)

5대 방향	11대 약속	30개 실행사업	'22～'26	
지식교육 콘텐츠 집결지로 도약	1. 세계 지식 교육 강국으로 도약	① 글로벌 지식 교육 전문 플랫폼 구축	1,208	1,240
		② UHD 디채널 및 모바일·OTT 서비스 선도	33	
	2. 혁신적 원격교육 생태계 조성	③ 원격교육 방송 시스템 구축 및 원격교육 플랫폼 고도화	96	1,441
		④ AR·VR·메타버스 등 체험형 디지털 교육 서비스 개발	789	
		⑤ 인공지능(AI) 학습진단시스템 구축	146	
		⑥ 유치원 원격교육 서비스 개발	410	
전세대 회복탄력성 증진	3. 실생활 기반 평생교육 콘텐츠 강화	⑦ 세대별 취약성 해소 및 회복탄력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364	660
		⑧ 전세대 과학적 소양 교육콘텐츠 강화	147	
		⑨ 전세대별 미디어 이용 주체의 리터러시 강화	148	
	4. 새롭고 다양한 신규 방송콘텐츠 제작 확대	⑩ 다양한 신규 콘텐츠 확대로 EBS 1TV 재방송 비율 개선	191	660
		⑪ 대한민국 교양·교육 대기획	195	
		⑫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205	
		⑬ 다큐멘터리 제작자 생태계 조성	69	
	5.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유아·어린이 콘텐츠 강화	⑭ 세분화된 연령별 맞춤형 영·유아 교육콘텐츠 제작	272	1,217
		⑮ 다양하고 차별화된 유아 어린이 교육콘텐츠 제작	944	
대한민국 미래교육 선도	6. 뉴노멀 시대 미래 교육의 비전 제시	⑯ 전세계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 대기획 프로젝트 제작	151	173
		⑰ 인공지능(AI) 교과목 콘텐츠 개발	22	
	7. 고품격 초등·중학·고교 교육콘텐츠 제작	⑱ 초중등 기초 학습 교육콘텐츠 강화	318	750
		⑲ 어린이·청소년 창의·인성·교양·전인 교육콘텐츠 제작	297	
		⑳ 미래교육 선도의 교육현장 지원 서비스 강화	134	
	8.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불평등 해소	㉑ 학습전용 태블릿 기반 비대면 교육 서비스 제공	21	29
		㉒ 학습 교재 무상지원 대상 확대	9	
양극화와 격차 해소	9. 대국민 참여와 편의성 강화	㉓ 시청자 기획·참여 제작 콘텐츠 개발	122	858
		㉔ 시청자 무료 보편 서비스와 시청자 권익 강화	736	
	10. 사회 공동체 회복 및 교육격차 해소	㉕ 시민성 구축으로서의 교육·교양 콘텐츠 제작	307	851
		㉖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콘텐츠 및 서비스 강화	466	
		㉗ 사회적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서비스 제공	77	
교육공영방송 설명책임	11. 책무수행과 수신료 사용내역 공표	㉘ 수신료 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6	314
		㉙ 구성인력의 다양성 강화를 위한 신규 채용 확대	308	
		㉚ 연차보고서 발간	1	
공통비			23	23
5대 비전, 11대 약속, 30개 실행사업			8,216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전체 재원 중 수신료비중은 5.4%로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지원에 따라 교육부의 자금지원이 확대[10]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별도법에 의해 설립된 공영방송으로서 일반적인 공영방송과는 달리 국가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책무 확대계획은 학교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지식교육 강국으로의 도약', '초·중등 기초학습 교육콘텐츠 강화', '인공지능 교과목 콘텐츠 개발' 등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가교육정책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국가정책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주어진 업무에 해당하므로 수신료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가교육지원기능이 수신료 사용이 필요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수신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표 10] 한국교육방송공사 재원 구조('21년도 예산기준) >

(단위 : 억원)

구분	공적재원				자체수입							총계
내용	수신료	정부기금	특별교부금 (교육부)	소 계	출판 사업	방송 광고	콘텐츠 사업	문화 콘텐츠 사업	기타 매출	사업 외	소 계	총예산
금액	194	330	1,124	**1,648**	983	250	169	162	659	18	**2,241**	**3,889**
비율	5.4%	9.2%	28.9%	**42.4%**	25.3%	6.4%	4.3%	4.2%	16.9%	0.5%	**57.6%**	**100%**

10)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재원 비중: 2019년 31.7%, 2020년 36.7%, 2021년 42.4%

< [표 11] 한국교육방송공사 기금 및 보조금 세부 내역('20~'21)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비고
정부기금수익	**30,271**	**33,024**	
프로그램제작지원	28,322	30,916	방송통신발전기금
해외한국어	496	500	방송통신발전기금
장애인방송	140	232	시청자미디어재단 수탁 (총 사업비 81.3% 자부담)
장애인인터넷서비스	199	200	시청자미디어재단 수탁 (총 사업비 20% 자부담)
소프트웨어교육	1,113	1,176	정보통신진흥기금
국고보조금수익	**64,160**	**112,393**	
고교강의사업	16,414	16,540	특별교부금
영어교육사업	4,507	3,979	특별교부금
AI영어말하기 연습시스템 구축사업	3,001	6,670	특별교부금
수학교육사업	2,503	2,500	특별교부금
교육콘텐츠개발사업	3,126	4,522	특별교부금
원격교육지원사업	33,063	33,401	보통교부금
온라인클래스재구조화사업	1,546	2,152	일반회계+특별교부금
온라인활용 학습콘텐츠	-	34,305	일반회계
AI학습진단시스템 구축사업	-	8,325	일반회계
자본보조금	**2,245**	**2,295**	자산의 차감항목(수익X)
방송인프라개선사업	2,245	2,295	일반회계

5) 공적책무로서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

한국방송공사의 '미래방송서비스 인재양성사업(1,300억원)'은 공적책무사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신규인력 700명을 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동 사업은 다른 공적책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공적책무의 하나로 포함하여 분류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소지역미디어의 다양성 지원 사업(3,577억원)' 또한 수신료 활용이 필요한 공적책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동 '중소지역미디어의 다양성지원사업'은 '중소방송다양성기금' 신설, 한국교육방송공사로의 수신료 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소방송다양성기금 사업 >

공영방송은 원칙적으로 공적재원인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방송광고매출이나 유료방송 수신료매출, 재송신매출과 같은 상업적 재원은 수신료를 보조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방송광고 규모가 축소될 경우 수신료의 추가적 인상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방향은 상업적 재원 비중을 축소하고 재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도 이러한 이유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고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는 본 조정안에서 수신료를 3,800원으로 조정하더라도 로컬광고 외[11]에는 방송광고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현행 방송광고 매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11) 한국방송공사는 로컬광고 전면폐지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20년 결산기준 로컬광고 수입액은 50.8억원임

방송광고를 유지하는 한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제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중소방송다양성기금'을 조성하고, 한국방송공사 광고수익의 20%(평균 397억원)를 매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합판매 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논의 중에 있고, 결합판매를 대체하는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 정책적 근거가 없는 기금신설 등의 내용을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수신료인상 시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사업은 한국방송공사가 방송광고 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수행하려는 사업이므로, 수신료 사용이 필요한 공적책무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수신료 지원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수신료 지원의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입장 차이를 먼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계획은 현재의 수신료 지원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향후 5년간 총 2,59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적책무의 확대수행을 위해 수신료 지원 비율을 19.3%로 상향, 향후 5년간 총 9,972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교육·교양 프로그램은 상당부분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방송공사도 수신료 조정안에서 고품질 다큐멘터리 제작, 기초과학 및 교육용 과학 프로그램 제작 등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제작하려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콘텐츠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별도 법인인 채널로서 분리되어 설립·운영되는 취지를 감안할 때, 이 중복성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와 관련하여 공영방송사간 이견을 보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영방송사간 자율적 합의가 어렵다면, 공영방송사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과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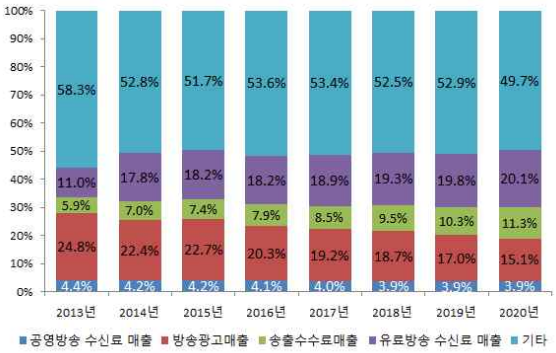
가.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정상황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수신료는 칼라TV가 도입된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된 이래 40년 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981년 당시 2,500원은 지금의 가치로는 약 629원에 불과하므로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는 실질적으로 1/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비중이 낮아지는 동안 상업광고의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방송공사의 총 재원중 수신료비중은 47.3%로서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을 구성하는 개념적 요건[12]의 하나인 공적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재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 공영방송의 영역을 구성하는 요건은 소유의 공공성, 재원의 공공성, 운영의 공공성임 (김국진 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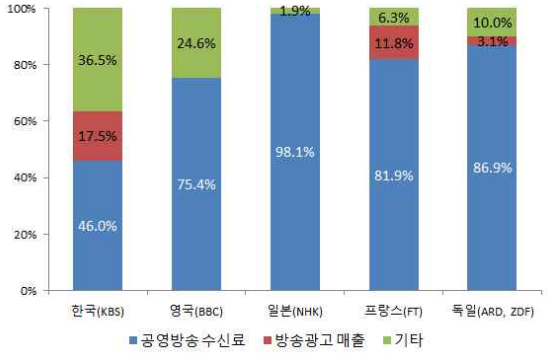
< [표 12] 주요 방송사업 매출추이 및 주요국 공영방송 재원구조>

[주요 방송사업 매출 비중 추이]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각호

[주요국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자료 : 한국방송공사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융합의 심화로 인한 미디어시장의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시청률은 저하되고 있으며, 방송광고시장은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수익의 경우, 2011년 1조 4,157억원에서 2020년 1조 3,522억원으로 연평균 0.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판매수익과 재송신 수익의 증가를 통해 방송광고수익의 악화를 일부 완화시키고 있는데, 프로그램 판매수익이나 재송신수익은 타 방송사업자(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배분받는 수익이기 때문에 사업자간 갈등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고, 또한 타사업자에게 의존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 한국방송공사의 재정상황 및 재정수지 전망

1) 한국방송공사의 수입・지출

고품질 프로그램, UHD방송, 디지털 콘텐츠 등 방송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재난방송 등의 공적책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방송공사의 수입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표 13] 한국방송공사 수입·비용 현황('16~'20) >

(단위: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연평균
사업수입	**14,866**	**14,326**	**14,352**	**13,622**	**13,622**	**70,787**	**14,157**
수신료수입	6,333	6,462	6,595	6,705	6,790	32,885	6,577
방송광고수입	4,207	3,666	3,328	2,548	2,319	16,069	3,214
기타수입	4,326	4,198	4,428	4,368	4,513	21,833	4,367
사업비용	**14,850**	**14,124**	**14,936**	**14,380**	**13,762**	**72,052**	**14,410**
방송사업비	6,122	5,648	6,478	5,958	5,546	29,752	5,950
시설운영비	1,036	1,047	1,082	1,129	1,123	5,416	1,083
시청자사업비	132	139	142	150	114	677	135
판매비와관리비	1,589	1,510	1,464	1,325	1,310	7,198	1,440
인건비	5,296	5,206	5,235	5,286	5,157	26,179	5,236
유무형자산상각비	676	574	536	533	511	2,830	566
사업이익(손실)	**16**	**202**	**-585**	**-759**	**-140**	**-1,266**	**-253**
사업외수입	469	613	406	944	720	3,152	630
사업외비용	147	159	142	161	172	781	156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338**	**655**	**-321**	**25**	**408**	**1,105**	**221**
법인세비용	90	91	0	9	81	271	54
당기순이익(손실)	**248**	**564**	**-321**	**16**	**327**	**834**	**167**

방송사업 수익의 축소는 콘텐츠 투자여력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2020년 방송사업비는 5,546억원이며, 이는 2018년(6,478억원) 대비 14.39% 감소(△932억원)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방송공사의 2020년도 총사업비용은 2018년(1조 4,936억원) 대비 7.86% 감소(△1,174억원)된 1조 3,762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방송공사가 인건비나 관리비의 감축보다는 방송제작비의 축소를 통해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방송제작비 중심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간 공영방송사로서 수신료수입 재원을 공적책무의 목적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충실히 사업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작비 규모의 축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무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한국방송공사의 생산성

한국방송공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이므로, 한국방송공사는 인적자원의 생산성 제고가 보다 크게 요구되는 공법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방송공사의 노동생산성은 2016년 1.4억원에서 2020년 약 1.3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7.62% 하락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의 자본생산성 또한 2016년 96.6%에서 2020년 83.8%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매출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과 재무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 14] 한국방송공사 생산성 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ㅇ 노동생산성[13]	140.5	140.2	123	115.9	129.8
ㅇ 자본생산성[14]	96.6%	90.2%	83.8%	80.5%	83.8%

3) 한국방송공사의 수지 전망

한국방송공사는 현행 수신료 하에서 자체적으로 전망한 향후 5개년의 사업 수입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광고 수입 하락(지난 5년간 연평균 -10.53% 역성장)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콘텐츠 수입확대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5년 후인 2026년의 총수입은 2020년 수준인 1조 4,3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는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을 통해 비용을 현재 수준 이하로 유지한다고 해도, 2026년에는 총사업비용이 2020년 대비 10.36% 증가한 1조 5,18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비용 전망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향후 5개년(2022년~2026년)간 총 3,175억원의 누적 재정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 기업의 사업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영업이익 + 인건비 + 감가상각비 + 제세공과금 + 순이자비용)를 기업의 연평균 인원으로 나눈 생산성
14) 자본생산성: 부가가치/연평균자본

< [표 15]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조정 전 수지 전망('22~'26) >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 수입	**14,663**	**14,309**	**14,372**	**14,184**	**14,302**	**71,830**
(1) 사업 수입	14,383	14,029	14,090	13,898	14,011	70,410
가. 방송사업 수입	14,242	13,884	13,940	13,743	13,850	69,660
1) 수신료 수입	6,984	7,064	7,140	7,213	7,283	35,684
2) 광고방송 수입	2,159	1,932	1,728	1,546	1,383	8,748
3) 기타수입	5,100	4,889	5,072	4,984	5,183	25,228
나. 시청자사업 수입	140	144	150	155	161	751
(2) 사업외 수입	280	280	283	286	291	1,420
2. 비용	**15,348**	**14,639**	**14,931**	**14,698**	**15,389**	**75,005**
(1) 사업경비	8,633	8,154	8,626	8,508	9,324	43,245
1) 방송제작비	6,908	6,371	6,778	6,589	7,328	33,975
2) 시설운영비	1,264	1,318	1,376	1,440	1,508	6,906
3) 시청자사업비	147	150	153	157	161	769
4) 일반관리비	190	191	193	195	197	966
5) 수신료징수비	82	83	84	86	87	422
6) 광고운영비	40	41	41	42	43	207
(2) 판매수수료	818	787	759	735	714	3,813
1) 위탁징수비	472	478	483	488	493	2,413
2) 광고수수료	345	309	277	247	221	1,400
(3) 법정지원금	251	247	244	241	239	1,223
1) 방송발전기금	55	50	44	40	36	225
2) 교육방송지원금	195	198	200	202	204	998
(4) 인건비	4,940	4,671	4,457	4,325	4,231	22,623
1) 임금, 복리비	4,487	4,243	4,048	3,929	3,843	20,550
2) 퇴직충당금	453	428	408	396	388	2,073
(5) 감가상각비	551	620	674	702	679	3,225
(6) 사업외비용	156	160	171	186	201	875
(7) 예비비	0	0	0	0	0	0
(8) 법인세비용	0	0	0	0	0	0
3. 당기순손익	**-686**	**-330**	**-559**	**-514**	**-1,086**	**-3,175**

한국방송공사가 제시한 당기순손익 추정치는 상기 향후 5개년의 총수입 추정금액, 총사업비용, 사업외 수입과 비용을 추가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의 결산 자료를 참고하면 직전 5개년도 연평균 사업외

비용은 156억원, 사업외 수입은 630억원으로 연평균 474억원, 총 2,371억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에서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사업외 비용은 175억원, 연평균 사업외 수입은 284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외 비용은 다소 증가(19억원, 12.2%)한 반면, 사업외 수입은 대폭으로 감소(△346억원, △54.9%)한 것입니다.

< [표 16] 최근 5년간 한국방송공사의 사업외 수입·비용 >

(단위: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연평균
사업외 수입	469	613	406	944	720	3,152	630
사업외 비용	147	159	142	161	172	781	156
사업외 수익	**322**	**454**	**264**	**783**	**548**	**2,371**	**474**

< [표 17] 향후 5년간 한국방송공사의 사업외 수입·비용 전망 >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연평균
사업외 수입	280	280	283	286	291	1,420	284
사업외 비용	156	160	171	186	201	875	175
사업외 수익	**124**	**120**	**112**	**100**	**90**	**545**	**109**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예상 가능한 사업수입과 비용의 추계치를 반영하여 재정수지를 전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사업 활동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므로, 당해 사업기간 중 징수되는 수신료수입과 부대수입 외에 자산의 구조조정 등 비경상적 자구노력에 의한 수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의 사업외 부문에서의 구조조정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누적 재정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인력 및 구조조정 계획의 타당성

한국방송공사는 2026년까지 정년퇴직 1,041명, 기타퇴직(명예퇴직 포함) 등 405명, 총 1,446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525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의 인력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향후 5년간 921명의 순감원을 통해 2,605억원의 인건비를 절약하고,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인건비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표 18] 연차별 인력 계획('22~'26) >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연초인원	4,550	4,407	4,164	3,941	3,793	3,712	
정년퇴직	-213	-223	-203	-128	-136	-138	-1,041
기타퇴직 (명퇴포함)	-30	-105	-105	-105	-30	-30	-405
신규채용	100	85	85	85	85	85	525
증감 계	-143	-243	-223	-148	-81	-83	-921
연말인원	4,407	4,164	3,941	3,793	3,712	3,629	

< [표 19] 연차별 인건비 비중 목표('22~'26)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인건비 비중	32.2%	31.9%	29.8%	29.4%	27.5%	

한국방송공사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정년퇴직자 자연감소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명예퇴직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신료 조정안에는 향후 5년간의 공적책무별 인력운영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한국방송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525명의 신규 채용, 700명의 공적책무 수행 인력 채용 등의 구체적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과감한 조직개편 및 엄격한 총원 관리, 직급별 정원관리 등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일반기업의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15].

5) 경영혁신 및 자구노력 계획의 적절성

< 수신료 위탁징수수수료 >

한국방송공사는 한전에 수신료의 6.15%(부가가치세 제외)를 징수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16]. 이와 같은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에 대해서는 한전이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 수수료의 수준이 과하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2012년 이후 위탁징수 수수료율이 동결되고 있어 인하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수신료가 3,800원으로 조정될 경우에 동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전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주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가 2012년 외부용역을 통해 한전의 위탁징수에 대한 원가산정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원가 재산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전과의 위탁징수 수수료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중인 바, 징수대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범위, 징수 원가, 업무량 등을 확인한 후 계약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 경영효율성과 설명책임 관련 >

한국방송공사는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등에서 경영효율성과 관련된 재무적인 지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이러한 지표가 공공적·공익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제작하는 공영방송서비스의 성격에 부합하지

15) 수신료 조정안 제출이후 감사원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총정원관리 및 직급별 정원관리 부실, 과도한 연차휴가보상수당 등의 문제가 지적됨

16) 우리나라의 위탁징수 수수료율은 6.15%이며(징수비용율은 9.75%), 징수비용율 기준 영국은 3.4% 독일은 2.72% 프랑스 1%, 일본은 10.8%임.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위탁수수료율(징수비용율)은 수신료의 규모와 징수방식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임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법인으로서, 수익성 등 사업의 효과성은 기업활동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서는 목표를 철저히 관리하고, 운영의 결과를 대외에 공시하여 평가를 받는 것까지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공시와 평가는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핵심적인 설명책임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공론조사결과 중 가장 큰 지지를 얻었던 과제는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책임있게 설명하며, 동시에 시청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명확히 구분된 사업별로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영성과를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한국방송공사의 불용자산 매각계획 >

한국방송공사는 이번 수신료조정안에서 2026년까지 폐소된 송·중계소 등 부동산 118 건 및 불용자산 등 20건을 매각함으로써 6년간 총 138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 및 공사 불용자산 등 유휴자산의 매각은 적극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통한 향후 재원조달 마련의 노력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불용자산의 매각이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나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매각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유휴자산을 발굴하는 등 종합적인 자원활용계획을 마련,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텔레비전수신료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가.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 제고

현재 회계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공히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수신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신료의 쓰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수신료 공론화과정에서도 '한국방송공사의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며 ~'와 관련된 과제가 최우선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서비스의 적정가격인 수신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직접·간접 비용이 구분 및 산정되어야 하며, 이는 구분된 실제 발생원가의 결산서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 서비스의 투입원가를 구분·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을 기반으로 한 구분된 원가계산서 및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사업부문의 구분된 재산상태 및 경영성과와 관련된 결산서가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방송공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수신료 인상액에 대해 상호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적정수준을 합의하기 위해서도 회계분리제도 도입 등 회계 투명성 제고는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수신료 조정절차 개선

1)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된 문제점

수신료가 공영방송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의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17]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이상, 국회의 입법적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적 통제의 필요성은 다른 측면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수신료 결정에 대하여 국회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영방송사가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 등에 관하여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재원의 결정과정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를 통한 굳건한 재정적 토대는 공영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것이 국회가 수신료를 결정하는 절차를 구성함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 하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1981년 이후 2,500원으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한국방송공사가 마련한 수신료현실화 방안이 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모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모두 수신료조정안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가·부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임기만료폐기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수신료에 대한 입법통제권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표 20] 수신료조정안 상정경과 및 결과 >

연도	금액(월)	인상안 제출 이유	결과
2007년	4,000원 (1,500원 인상)	디지털 전환, 난시청 해소 왜곡된 재원구조 정상화 방통융합시대 공적책무 수행	제17대 국회 임기만료 자동폐기
2010년	3,500원 (1,000원 인상)	2012년 디지털 전환완수 수신료 중심 안정적 재원구조 방통융합 및 시장개방 대응	제18대 국회 임기만료 자동폐기
2013년	4,000원 (1,500원 인상)	재정 건전성 확보 수신료 중심 공영적 재원구조 확립 디지털·스마트시대 공적책무 수행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자동폐기

17) 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결정, 헌법재판소 2008. 2. 28. 2006헌바70 결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국회는 정부, 공영방송과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수신료수준의 검토 주기, 조정안 작성주체, 국회 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적책무와 수신료 금액 결정 주기

경제사회적·기술적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 또는 우선순위는 끊임없이 바뀌게 되며,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수신료 규모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무와 관련하여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절차[18]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검토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수신료수준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19]. 이는 현행 「방송법」이 수신료금액과 관련하여 결정절차만 규정[20]하고 있을 뿐, 적절한 재검토기간, 즉 조정주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서 기인합니다.

특히, 미디어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공영미디어로의 확장 등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해야 할 공적책무와 수신료의 수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적책무과 수신료수준에 대해서는 정기적(3년 또는 4년 등)으로 검토하여 확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18) 한국방송공사의 최근 재허가심사는 2013년, 2017년, 2020년에 있었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제도를 대체하는 공영방송협약을 추진하는 바, 이는 법적 근거가 분명한 공영방송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해 집중적, 주기적으로 검토, 개선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기반한 것임

19) 한국방송공사는 2013년 이후 8년만에 다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함

20)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신료와 물가를 연동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신료 조정안 작성의 주체

현재 「방송법」은 수신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주체를 한국방송공사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수신료금액을 활용하는 당사자인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영방송 수신료 수준 전체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식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신료조정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신료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한국방송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원액을 조정,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방송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송법은 수신료 결정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현재 규정을 가지고 방통위가 수신료조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공영방송정책은 공영방송이 어떤 공적 책무를

얼마만큼 이행할지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결정하게 되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수신료조정안의 작성주체와 관련하여 수신료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방송공사가 아니라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정부 또는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신료조정안을 작성하는 방식은 공영방송과 관련된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된다는 장점[21]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제3의 기관(수신료위원회)의 경우에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지만 수신료의 결정이 정부의 공영방송정책과 분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방송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방송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공영방송제도의 모범이 되고 있는 영국의 수신료위원회설치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영국 의회에서는 수신료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영국 상원의 보고서는 수신료위원회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신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정부가 수신료의 결정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신료위원회(가칭 BBC펀딩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22].

21)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공적협약제도는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됨. 공영방송사의 공적책무는 수신료를 통해 이행이 담보되므로, 공적책무에 관한 논의와 수신료에 관한 논의는 연계되어야 함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정책 주무기관이 공영방송정책과의 연계성 하에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포괄하는 수신료조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되, 그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 국회에서의 수신료 처리절차

한국방송공사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수신료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동 조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심사하는 절차를 취해 왔습니다.

수신료조정안은 엄밀히는 법안도, 정부의 예산안도 아니므로 그 어떤 심의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안심사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수신료조정안을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나 연내 처리에 대한 부담이 없어 처리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의 수신료조정안이 모두 임기만료폐기된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예산심사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적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차년도까지 처리가 미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에는 국회의 명확한 심사결과를 알 수 있게 되고,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개선과 보완도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신료조정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구체적인 공적책무의 필요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이 검토대상이 되므로 예산안에 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국회가 가진 수신료결정에 관한 권한을 책임성 있게 행사한다는 점,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지속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절차를 통해 수신료조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2) 동 내용은 영국상원(house of lords)이 2019년 발표한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s vital as ever」에서 발췌(52p)한 것임

Ⅳ. 종합의견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는 언제나 균형된 뉴스 편성과 시사보도로 국민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고품격 교양·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앞으로도 정치·경제·사회적 독립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 국가사회의 통합,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적재원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 간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조정안은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가치와 시청자 권익향상을 위한 방향이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미래 위상과 역할, 중장기 재정수지 전망 및 공적책무 확대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환경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한국방송공사는 공적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감한 경영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공적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회계분리제도 등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수신료의 쓰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그 이행을 지원하는 수신료의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 및 징수를 위해 수신료조정안의 작성과 제출, 처리 등 절차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회는 수신료 조정안의 검토와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적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수신료 회계분리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등 공영방송이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